

한상진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중민 이론을 주창했다. 교수모임이던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2010년 정년과 함께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을 창립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베이징대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 중산층과 중민, 사회운동, 전통과 현대, 인권, 제2근대 변동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 제18대 대선평가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파리 고등사회과학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중국 베이징 칭화 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였다. 저서로는 *Habermas and Korean Debate*, *중민이론의 탐색*, *현대사회와 인권*,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386세대의 빛과 그늘*, *한국: 제3의 길을 찾아서*, *중민 이론과 한국사회*, *Divided N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등이 있다.

양극화 시대의 중민: 30년의 회고의 전망

한상진(서울대)

한자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에서 ‘중민’ (中民)을 이루는 두 자, 즉 중(中)과 민(民)이 갖는 각각의 함의 및 둘을 결합했을 때의 함의는 다양하고 풍부하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한 마디로 끝임 없이 재구성이 가능한 열려진 개념이다.

우선 밝힐 점은 내가 중민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였다. 다만 ‘중민 현상’에 눈 뜨게 된 것은 1985년 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중민 이론 30주년>을 말 할 수는 있다. 따라서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기 전에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민 이론 30년 회고

30년 전 우리는 경제호황의 국면에서 민주화 변혁기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민중의 화두에 자주 부딪혔다. 쉽게 말해,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수혜계층으로, 민중은 정치적 경제적 배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두 용어는 어쩐지 대립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학계의 논의, 대중매체의 보도를 통해 그런 이미지가 사회인식의 틀로 형성되었다. 중민은 이런 사회적 소통과정에서 등장한 일종의 혁신적 개념이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중민의 중(中)은 중산층을 가리켰고 민(民)은 민중을 가리켰다. 상반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던 두 개의 정체성을 하나로 융해시킨 역동적인 행위 주체를 중민이라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은 ‘민중’보다 ‘시민’의 화두가 더 광범하게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민의 뜻 역시 변하고 있다.

30년 전과는 달리 오늘의 현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특징된다. 빈곤층이 갈수록 늘고 가계 부채는 증가하며 청년은 일자리 얻기가 갈수록 힘들다. 사회가 불안하고 생존경쟁의 압박이 목을 누른다. 한 마디로 위험사회가 도래했다. 그러나 30년 전은 달랐다. 적어도 취업의 문은 계속 열렸다. 엘리트의 꿈을 버리고 민중 속으로 들어갔거나 체제에 저항했던 대학생들도 결국 안정된 일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은 가중되는 경쟁의 압력에 적응하느라 미래의 꿈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정치도 양극화의 특징을 보인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정권과 학생운동이 대립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야 거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의 정치제도를 이끌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겨냥하기보다는 이를 벗어난 이념, 지역, 감정의 대립으로 정치를 이끈다.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정권획득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때문에 사회 전체가 흑백 논리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다소 단순화된 감이 있으나, 2015년 한국의 현실은 이런 이중적 양극화로 특징된다. 그렇다면 80년대의 체험으로 성장한 중민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현실에 중민 이론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실로 벽찬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순차적으로 발제를 하겠다. 우선 중민 이론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중민의 개념에 담긴 의미를 정리하겠다. 중민 이론이 거둔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실패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중민 이론이 나름의 쓸모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겠다.

역사적 배경: 중산층 논쟁

회고해 보면,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도시 중산층이 현저히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많은 농촌 출신이 도시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얻으면서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하는 경험을 했다.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부모의 서민적 뿌리가 몸에 밴 상태였다. 서민과 구별되는 독특한 중산층 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이었다. 서구에서도 중산층이 대두하던 초창기에는 “중간으로 올라온 부류들”(the middling sorts of people)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뜻인 즉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유사했다. 중산층은 늘고 있었지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지 모호했고 따라서 이 주제에 공중의 관심이 모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 학생 운동권은 중산층을 보수적 집단으로 규정했다. 대신 불평등이 누적되는 기층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상정하는 논의를 주도했다. 당시 대학의 사정을 보면, 공식 기구들은 군부독재 체제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러나 비극적인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은 현저히 급진화 되었다. 대학은 최류탄과 화염병의 공방이 이어지는 살벌한 공간으로 변했다. 탈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당국은 일종의 유화책으로서 ‘학원자유화’와 함께 졸업정원제를 도입했다. 대학 안에 집회 결사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고 지하 서클, 동아리 모임 등이 번창하게 되었다. 입학 정원을 30% 늘리는 대신 대학 수업의 정상화로 성적이 나쁜 하위 30%를 졸업에서 강제 탈락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학생운동권을 통제하려는 교육지책이었지만 30% 강제 탈락은 학생 대중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결국, 대학교육의 정상화와는 반대로 대학은 온갖 급진적 이념논쟁의 활화산으로 변했다. 전공을 불문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른바 ‘금서’를 읽는 데서 지적 쾌감과 해방을 느꼈다. 온갖 노선의 사회변혁 논쟁이 대학을 휩쓸게 되었다.

그 한 가운데 있었던 쟁점의 하나가 바로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이었다. 당시 집권세력은 학생운동권의 급진 이념을 체제전복의 위협으로 포장하여 중산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나 당시 중산층의 생각은 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귀중한 경험적 연구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85년 1년 동안 국가공무원, 언론인, 화이트칼라, 생산노동자, 자영업자, 이익 집단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창원, 울산, 포항, 구미 등 산업단지 등을 찾아 조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비교적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나를 학생운동권의 가정과는 반대되는 길로 이끌었다. 내가 이해한 정치경제학과 관료적 권위주의의 모델들을 검토했을 때, 한국은 근대화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근대화가 성공하면서 그 성공의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변혁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피해와 박탈, 소외가 가중되는 무산층이 변동을 이끌기보다는 근대적 성격을 획득한 중산층 안의 개혁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중민은 이런 집단

을 호명한 것이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진입했지만 의식과 행동은 건강한 민주성 또는 서민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혁을 요구하는 집단을 가리켰던 것이다.

왜 정체성에 주목하는가?

나는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인간행위의 문제 또는 사회변동의 주체 탐색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기성 이론들에서는 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거의 없는 구조적 설명 모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맑스주의도 마찬가지였다. 정교한 듯 보이고 분류 기준도 복잡한 계급 모델의 큰 약점은 인간의 의식과 실천이 한갓 종속변수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실천을 규정하는 요인을 정확히 포착하기보다는 제시된 객관적 계급분류 모델에 따라 실천의 장이 열린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나는 이런 유형의 접근들에 실증을 느꼈다. 대신 소통과 연술의 관점에서 인간 실천의 역동성을 포착하려는 시도들에 매력을 느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체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잠시 회고해보자면, 30년 전 나는 40대 초의 중견 학자로서 글도 많이 썼고 책도 여러 권 펴냈다. 논쟁을 적극 이끌었다. 통계청의 자료들로 중산층 규모를 측정하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결국 부딪히는 문제는 누가 중민인가, 중민의 규모와 의식, 행동양식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내가 착안했던 것이 정체성 문제다. 이것은 전통적인 계급론과는 다르다. 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정체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 남성과 여성은 의식과 행동이 다르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르고 진보는 보수와 다르다. 그런데 여러 정체성 가운데 정치의식과 행동을 규정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경험적 연구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으며, 나는 두 축을 교차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하나는 경제적 생활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발전에 대한 규범적 지향이다. 생활수준은 중산층에 속하는가의 여부로 측정이 가능하다. 규범적 지향은 시대에 따라 측정방식이 달라진다. 80년대 중반에는 민중의 정체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드리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 오늘날은 정부중심이나 시민중심이나의 판단이 중요하다. 풀어 보자면, 중산층 여부가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발전의 규범적 지향도 영향을 미치지만, 두 축을 교차시키면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 정체성 모델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경험적 자료 분석을 하면서 나는 결국 중산층 가운데 보수적 성격을 갖는 주류 중산층과 개혁적 성격을 갖는 중민을 구분했고 이 두 분파를 비교하는 연구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이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강한 저항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 노동자 가운데서도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조직화된 노동자는 기술수준, 임금, 의식의 면에서 단순한 무산대중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아직 중산층은 아니지만 중산층 진입이 거의 확실한 대학생, 즉 80년대 세대가 사회변혁의 한 중심축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중민 이론의 성공과 실패

중민 이론이 거둔 성과가 있다면, 그 첫째는 1987년 6월 민주화 대 항쟁 때 거리를 메운

대학생 청년 세대와 함께 많은 넥타이 부대가 동참한 것이다. 이로써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신중산층의 사회변혁 역할을 강조했던 중민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아울러 7-8월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숙련기술 노동자들이 노동권익 신장 운동을 펼쳤다. 이것 역시 근대적 성격을 획득한 기술노동자 중민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둘째는 중민의 지속성 명제가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출현과 성공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이 쟁점은 80년대 세대의 성격규명과 연관된다. 80년대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따라서 80년대의 학생운동과 대학문화를 통해 획득한 이들의 정체성이 졸업 후에도 과연 유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들을 80년대의 상황에서 사회변혁의 주체로 상정한 것은 맞지만 그 뒤에도 그런 것인가, 다시 말해, 이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기의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동시대의 체험으로 가꾸어진 지속가능한 세대현상인지의 쟁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80년대 세대의 질적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것은 어디서나 나타나기 마련인 청년기의 과도기적 현상과는 다른 응집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인다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노사모가 결성되고 우여곡절 끝에 2002년 대선 승리를 이끌자 대중의 관심은 폭발했다.

그러나 중민 이론의 눈으로 보자면 여기가 정점이다. 그 뒤로는 참담한 실패가 뒤따른다. 특히 2004년 총선에서 80년대 운동권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80년대 세대의 신선한 의미가 퇴색했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정치 신인들이 놀랍게도 빨리 기성 정당의 기득권에 포섭되어 뿌리를 망각한 채 권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중에 대한 부채 의식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정책 개발에 앞장 서야 할 이들이 민생과 무관한 이념 논쟁의 침병이 되고 당권 쟁취나 유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12월 총선을 통해 운동권 경력의 정치 신인이 대거 입성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중민의 잠재력은 남아 있는가? 중민 이론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시대의 중민

단적인 보기가 이미 언급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젊은 세대가 생존의 불안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80년대의 눈으로 중민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양극화의 추세가 1)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2) 상당히 구조적인 원인들이 중첩 작용하여 나타날 때; 3)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정책수단이 제한될 때 우리는 비상한 관심으로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벌 기업의 경영전략, 대기업 중심 노조의 내부자 이익방어 전략, 정부 경제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 여론주도층의 시장중심 이데올로기 등이 세계화에 연계되어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수 부유층의 수입과 재산은 늘지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 또는 근로빈곤층은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993년 73.5%였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47.2%에 불과했고 2014년에는 40.7%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대기업이 번창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고용증가는 1-29인 미만의 영세업체에서 가장 현저하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빈곤층이 밀집해 있다.

다른 한편 정치의 양극화, 예컨대 이념갈등과 정치 분열이 심각하다. 정치의 규범적 목표

는 원래 기존의 사회균열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활용함으로써 정치 집단의 기득권이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로 인한 제로섬 게임이 흑백감정의 본능적인 체질로 굳어질 때, 정치는 양극화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아무리 말로는 국민통합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 반대로 가기 쉽다. 이른바 ‘적대적 공생논리’가 그것이다.

중민 이론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던져야 할 심각한 질문은 이런 상황에 새로운 발전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이다. 중민은 어디 있으며 중민 이론은 무슨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해답의 실마리는 일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리더십의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분명한 점은 사회 안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집단의 협력이 없이는 양극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단기적으로는 다소 손해를 본다 해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탈출구는 열린다. 수단 방법을 총동원한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절제, 협의, 타협의 정치가 요구된다. 분열되기 쉬운 집단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양보하는 리더십,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힘으로 소모적 분쟁을 사회적 협력으로 막고 갈등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국내외 압력에 대응하는 역량은 그만큼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민 이론의 시사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갈수록 높아져가는 현실에서 중민 이론은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이 한국 사회 안에 있다는 암시를 준다. 80년대 중민의 경험에 각인된 도덕적 자원은 집단적 이기주의, 조직 안의 패권의 장악과 유지, 기득권에의 집착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엘리트 의식의 극복, 약자의 권익 신장, 공존을 위한 사회 봉사, 소외 계층의 포용과 이해 등이었다. 80년대 운동권 정치인의 오류가 심각하지만, 80년대에 꽃핀 중민문화의 잠재력은 아직 소진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개혁 정치에 어떻게 재 접목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 사회의 중심부문으로 진입한 중민이 사회공존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제기된다. 노블레스는 원래 ‘고귀한 신분(귀족)’이란 뜻이고, 오블리주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노블레스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노블레스의 ‘고유속성’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가능성은 중민에게 아직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노동현장 참여, 도시 빈촌의 야학 활동, 의료봉사, 농촌봉사 등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성공이 사회제도의 혜택 덕분이며 경쟁에서 낙오한 하류계층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내면화시켰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갈수록 공존보다 생존의 요구가 절박해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시대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이끌 수 있는 인지적 도덕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찾는다면, 누구보다도 중민의 소진되지 않은 잠재력에 주목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80년대 세대의 문제

이런 희망의 눈으로 80년대 세대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민은 원래 근대적 성격을 획득한 민중의 핵심으로서 신중산층, 숙련기술 노동자, 대학생 청년

세대를 가리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범주, 즉 80년대 세대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의 질문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대선을 통해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80년대의 학생 운동 또는 청년 운동을 배경으로 한 엘리트들의 정계 입성이 있었고 매스미디어는 ‘386’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다. 이로써 중민의 핵심은 80년대 대학 세대이자 이른바 386 정치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생겼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우리가 80년대 세대에 주목한다고 해서 이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자동적으로 중민이라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만이 중민이라는 것은 더욱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중민의 판별 기준은 여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80년대 대학 체험이 독특하고 강력했으며 학생운동 참여 여부를 떠나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도덕적 지지가 학생 대중을 단결시켰다는 점에서 80년대 세대를 중민의 대표적 보기로 간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다니지 않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같은 연령대로서 80년대의 변동을 체험한 사람은 중민의 성격을 갖는다. 공유된 체험이 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세대의 특성이 청년기의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세대현상인지는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이에 관해 나는 80년대 세대의 체험이 독특하고 응집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들이 사회 진입 이후 적응을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성이 유실되기보다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는 1981년 서울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89년까지 매 학기 과제물의 일환으로 수강생들에게 생애사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각자가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생애사적 경험의 자료 가운데 체험했던 가장 힘든 갈등의 사례를 뽑아내 이를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의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보고서를 쓸 기회는 없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으로 열심히 보고서를 썼다. 당시는 모두 욕필이었다. 이리하여 모두 2,400여개의 보고서가 모였다. 나는 매 학기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정치현실은 암담했지만 교육자의 보람도 느꼈다. 보고서에는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을 수반하는 산고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가치관의 변화, 탈인습적 인간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쉽게 사그라질 수 없는 변화,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뼈대와 골격은 유지될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둘째, 삶의 실천방식이 특별했다. 교육을 통한 성공신화가 강력했던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은 엘리트 예비군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엘리트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 이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 “민중에 대한 부채 의식”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 때문만이 아니라 하류층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인식을 뜻한다. 이 판단은 예나 지금이나 옳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할수록, 그리하여 하류층과의 공존을 도모할수록 사회는 건강해진다. 80년대의 대학생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부조리한 현실을 직접 뜯어고치겠다는 의욕이 강했다. 불법 취업 등이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먼저 성공하여 자신의 뜻을 편 다음 민중에 봉사하는 방법도 좋다고 권했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도시 빈민촌이나 공장 지대에서 야학 등의 봉사 활동을 많은 학생들이 했다. 청년기의 이런 삶의 체험은 영향이 오래 가기 마련이다.

조심스럽지만, 80년대 세대의 체험에 녹아 있는 도덕적 자원은 아직 살아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자원을 운동권 정치인의 행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 도덕적 자원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표현되는가는 연구해볼만한 경험적 문제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사회의식, 예컨대 차별 철폐, 기회의 평등, 공평성, 소수자 인권 보호, 빈곤층 복지 증진, 공정한 법치 등 사회정의에 관해 80년대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재능의 사회적 기부, 약자를 돕는 봉사 활동, 시민운동 참여, 공익추구 활동 등에서 다른 세대보다 앞서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며 한 세대의 체험에 녹아 있는 도덕적 자원이 추후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는 기억을 재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소통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과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 시대의 중민

그러면 이제 80년대의 상황구속성을 벗어나 중민의 뜻을 생각해보겠다. 어느 시대에도 소수의 지배집단이 있고 다수의 민중(서민, 평민, 양민 등)이 있다. 그 사이에 중산층이 있다. 이들의 크기와 성향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이 준다고 하지만, 과거의 신분사회,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이들은 대체로 학력이 높고 집단 이익을 넘어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쟁점들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다. 어디서나 이들의 일부는 질서, 즉 사회 안정에 관심이 크다. 또 다른 편은 변화, 즉 개혁에 관심이 있다. 각 분파의 크기와 성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 1960년 이래의 초고속 산업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경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중산층의 양분파가 다 같이 크고 강고해진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중민은 사회의 중심 부문에 위치한 개혁지향적 집단을 가리킨다. 중민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된다. 중국에서도 이들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중민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발전한 보기다.

그런데 지식정보화 시대에 소통혁명이 이루어지면 중민의 특성이 변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압제가 소통을 가로막는 상황에서는 중민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변동을 자극하고 촉매 한다. 그러나 소통의 시대가 열리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가치관의 문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 다시 말해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진다. 정보 혁명은 이 물결을 더욱 촉진한다. 다양한 정보와 성역 없는 쌍방향 소통은 당연시된 고정관념의 검증에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보가 보수의 고정관념을 검증하듯이, 보수는 또한 진보의 고정관념을 검증하려 한다. 여기서 중민은 독특하게 “탈인습적” 가치관을 대변한다.

이것은 중민 현상이 탈인습적 가치관을 따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됨을 뜻한다. 쉽게 말해, 80년대 세대는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둘러싼 거시적 고정관념의 해체를 지향했다면, 디지털 시대는 일상생활 안의 미시적 고정관념의 검증과 해체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 핵심은 중민의 에토스는 전승된다는 것이다. 80년 세대와 디지털 세대는 명확히 구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서 성장했다. 집단적 열망도 다르다. 그럼에도 이들은 탈인습적 가치관을 통하여 중민의 성격을 공유한다. 중민이 이끄는 사회변동의 방향이 정치적 민주화로부터 일상생활의 민주화로 이행하는 논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또한 중민 현상이 특정 시기의 특정 쟁점에 결부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동의 심층 문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종합하자면, 중민 현상의 이념형적 특성은 탈인습적 가치관에 있으나 이 가치관의 구체적 표현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탈인습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주체, 즉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기결정권의 확립하는 주체는 사회중심부문에 위치한 개혁지향적 집단, 즉 중민이 되기 마련이다. 한국은 지식정보화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80년대 세대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디지털 세대가 탈인습적 가치관을 통해 중민의 성격을 공유하는 흥미로운 사례다. 이를 통해 거시적 차원의 검증이 일상생활의 미시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SNS 소통혁명을 선도하면서 정치사회 변동을 자극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은 탈인습 가치관의 전승을 잘 보여준다.

중민 이론의 미래

중민의 중(中)과 민(民)을 결합하여 오늘과 내일을 전망할 때 하나의 큰 도전은 위험사회의 충격이다. 중민 이론은 어느 정도 근대화의 낙관적 전망 위에 서 있었다. 중민은 근대화의 결실이었고 이런 근대적 성격의 주체가 사회변동을 이끈다는 명제였다. 그러나 이 시각이 무너졌다. 근대의 기획은 놀랍게 성공했지만 또한 전대미문의 위험사회를 가져왔다. 위험을 예방 관리하고 시민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위험 협치는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정부기구들의 조직된 무책임이 클 뿐 아니라 위험 자체가 초국적 연계 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시민의 위험 파수꾼 역할, 시민과 전문가, 정부 정책 전문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 중민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시민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 틀로 중민 이론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심대한 위험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그 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잠재력은 시민사회가 활발하고 깨어 있다는 것이다. 중민 이론은 이에 주목하여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 개념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안은 중민을 도출했던 분류 모델을 일신하여 시민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다. 분류의 한 축은 사회경제적 위치다. 이것은 앞서 사용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규범적 지향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단순화시켜, 주요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사람들이 정부판단 우선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민판단 우선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축을 교차시키면, 네 개의 시민 범주가 나온다. 1) 국가시민 (state citizen): 사회의 중심부문에서 정부 우선의 입장을 갖는 시민; 2) 공공시민 (public citizen): 사회의 중심부문에서 시민 우선의 입장을 갖는 시민; 3) 민중시민 (popular citizen): 사회의 기층 부문에서 시민 우선의 입장을 갖는 시민; 4) 순응 시민 (compliant citizen): 사회의 기층 부문에서 정부 중심의 입장을 갖는 시민. 이 가운데 국가시민은 주류 중산층의 다른 표현이고 공공시민은 중민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개념 틀로 중민 이론은 국가시민과 구별되는 공공시민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포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이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를 밝힐 수 있다. 국가 관료제와 구별되는 공공영역, 관제 언론과 구별되는 공론의 역할을 포착할 수 있다.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 뿌리 깊은 공(公)의 상상력을 중(中)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소통에 방점을 둔 공공시민과 집합행동의 성향이 강한 민중시민을 구별하는 데도 유용하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국가시민과 공공시민의 가치지향은 뚜렷이 구별된다. 공공시민과 민중시민은 상당한 공통점을 갖지만 차이도 적지 않다.

중민이론 30주년을 맞이하여 중민 이론은 공공시민과 국가시민 그리고 민중시민의 관계 및 역할을 다양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시대에 사회변동의 주체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참여적 위험 협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숙의민주주의의 잠재력은 어디서 성장하는지, 동아시아의 미래를 누가 이끌고 갈 것인지를 국제적 개념 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긴밀한 연구협력이 요구된다.